

‘비선실세’ 논란 확산... 연말정국 ‘시계제로’

정기국회 폐회, 고작 130여개 법안만 처리...주요 쟁점법안 제외

野, “조기 레임덕” 대여공세 고삐...여권내 개헌논의 다시 고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비선 실세’ 논란 속에 결국 핵심 쟁점법안 처리는 유보된 채 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당초 여야가 8~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30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으로 8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법제사법위에 법안들이 대거 보류됨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는 큰 쟁점이 없는 130여 개의 법안들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송파 세모너 3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법률 제정안과 세월호 후속 3법인 ▲해운법 개정안 ▲선원법 개정안 ▲선박안전법 개정안이다. 여기에 관공비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에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이 주요 쟁점 법안이다.

하지만 쟁점 법안들은 야당이 요구하는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 및 특감,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과 연계 논의의 예정이어서 원만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연말 정국의 ‘화약고’로 등장한 비선 실세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12월 임시국회 운영의 카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정지연합은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당장,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동시에 12월 임시국

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개헌 논의의 시작은 사실상 ‘정권의 블랙홀’로 여겨지는 만큼 비선 실세 논란에 상처 입은 정권의 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빼놓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등 12월 임시국회에 전력을 다한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시도가 다시 고개를 드는 등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당내 비주류의 리더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기구인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개헌 행보에 다시 나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상임위 통과 화제의 법안 2편

지역자원시설세 두배 인상 한빛원전 488억으로 ‘경충’ 주승용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9일 화력·원자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따라 지자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안전행정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남의 경우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244억원에서 488억원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기준으로 34억원(여수 11억원, 광양 23억원)에서 6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험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

‘게리맨더링 금지법’ 발의

새정치 정치혁신위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게리맨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 가부만 의결토록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원혜영 혁신위 위원장은 “게리맨더링 금지법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국무회의에 최경환 부총리, 김기춘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임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피해자 611명

추가 보상 근거 마련

임내현 의원 ‘7차 보상법’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제 6차 심사 이후 새롭게 발견된 5·18 피해자를 위해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차 보상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기록에서 드러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중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유공자 심사의 법적 근거가 된다.

지난 2009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5·18 관련 승차 및 훈방자’ 22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기존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5330명의 명단에는 계엄군에 의해 구금·연행된 인사 2212명 중 611명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보상 사실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 했거나, 관련 서류 미비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다. 이 법안의 통과로 611명의 5·18 피해자들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박지경기자 jkpark@

박대통령 업무보고 1월 12~23일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1월12~23일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9일 이같이 밝힌 뒤 “내년도 업무보고는 4대 국정기조와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감안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를 그룹으로 묶은 뒤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4가지 주제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만 2차례로 나눠서 진행된다.

부처들이 주제별 과제를 정해 관련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을 상호 연계하는 입체적 보고를 하게 하도록 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대통령 “국무위원 모든 언행 사적인 것 아니다”

‘비선실세’ 파문속 내각 다잡기... 유진룡 전 장관 처신 겨냥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등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단순히 내각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정운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 이후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였다.

따라서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

련돼 박 대통령이 내각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의 오찬에서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짜리시어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일축하면서 “잡나는 일이나 두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 데 이어 이날 내각 역시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언행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처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학부

▶정시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5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포크/기타, 일렉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댄스, 특수연기, 심리상담사 등	3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② 원서접수 : 2014. 12. 19(금) ~24(수)
 ③ 전 형 일 : 2015. 1. 6(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소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세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종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종

원적외선 히터의 11종

대형 세습기의 2종

이동식 에어컨의 11종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종

무등산업 ☎ (062) 372-7585 / 010-3601-7701

사·군 취급점 선착순 모집